

“욕먹을 각오로 일한다”... 진짜 욕먹는 野 혁신위

의원 정수 증대안 등 ‘폭탄성 발표’에 내우외환

오늘 당 정체성 확립 방안 발표엔 분란 더 커질듯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잇따라 발표하는 혁신안이 당 지도부를 난처하게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혁신위 활동이 문제인 대표 체제를 지원한다는 의구심을 품은 비주류의 마음을 달래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혁신안의 정치적 파장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다.

혁신위가 최근 발표한 새누리당식 오픈 프라이머리 반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이를 위한 의원 정수 확대가 그 예다. 지도부는 내용상으로 혁신위 안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굳이 공론화하지 않아도 될 사안을 발표하는 바람에 대국민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때문에 당 지도부는 혁신위가 벌여놓은 일을 주위담기에 바빠 보인다.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에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불필요한 공방으로 당력이 분산되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공동 토론회를 개최해 어느 당의 방안이 합리적이며 개혁적인지 토론하자”고 새누리당에 역제안하며 혁신위의 오픈 프라이머리 반대가 새누리당의 방식을 문제 삼은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표는 특히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당 혁신위가 제안한 건 비례성을 높여 지역구도를 타파하지는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혁신방안과 같은 것”이라며 “지금은 국회 의원 정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의원정수 확대와 연결되는 건 아니다”면서 “의원정수는 앞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때 함께 논의하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원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필요한 정수를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연속 당 지도부의 금기사항인 의원정수 문제에 대한 개인

적 소신을 피력해 당내 ‘투 톱’인 대표와 원내대표 간 엇박자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문 대표의 ‘탕평 당직 인선’을 계기로 모처럼 화해 무드에 접어들어 두 사람이 다시 불협화음을 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혁신위가 28일 당 정체성 확립 방안을 발표하면 당내 분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혁신위는 “민생을 실천 속에서 해결한다”는 키워드 아래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새정치연합의 실천 과제를 제시한다는 방침이지만 고질적인 좌우, 중도 논란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중도를 강조해온 비주류에서 혁신위가 당을 또다시 ‘좌클락’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강하게 품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위가 공천 문제를 넘어 당 정체성까지 다루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혁신위 임미애 대변인은 “지금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얘기를 할 집단이 필요하다”며 “마음에 안들 수도 있지만 이 시기에 필요한 일은 해야 한다. 욕먹을 각오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정보위원회 신경민(앞) 간사와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국정원 내국인 해킹’ 의혹 정면충돌

이병호 원장 “내 직을 걸고 불법사찰은 없다”

野 “구체적인 자료 없고 합의 사항도 안지켜”

국가정보원의 ‘내국인 해킹 의혹’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한 조짐이다. 정치권에선 내달 중순까지 약 한 달간이 해킹 의혹 사건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27일에도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상임위가 가동돼 여야가 충돌했다.

◇정보위=국가정보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에 원본 파일 없이 요약본 형태로 정보위원들에게 ‘불법사찰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브리핑을 하자 야당이 강력 반발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현안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의 의혹제기에 대해 “내 직을 걸고 불법 사찰을 한 사실이 없다”며 “(국정원이 구매한) RCS(원격조정시스템)를 가지고는 카카오톡도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러나 기밀사항을 이유로 자살한 임모(45) 과장이 삭제했다는 원본자료 등 구체적 자료는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당 정보위원들은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증 자체가 불가

능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사실상 우리당의 자료 요구에 대해 자료를 제출한 게 없다”며 “지난 23일 여야합의 사항은 오늘 정보위를 사실상 청문회에 준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자료제출은 처음부터 로그파일 원본은 안 된다고 국정원이 이야기했다”며 “우리 당도 그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국정원의 원본 제출 거부를 당연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통신위=여야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도·감청하는 RCS 프로그램이 감청 설비인지 여부를 두고 치

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국정원이 감청설비인 RCS를 구입하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만큼 불법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RCS는 관련 법상 감청 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은 “RCS는 소프트웨어 감청설비다. 소프트웨어라 감청 설비로 볼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궤변”이라며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감청장비는 ‘어떻다’고 규정이 돼 있다. 하드웨어 중심이고 시행령에도 PC와 스마트폰은 감청장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고발장을 접수한 이 사건을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에 맡기고 수사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여야, 국회의원 정수 확대 공방에 정개특위, 선거제 논의 ‘제자리걸음’

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 비례제 도입 놓고도 이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선거구획정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간 견해 차로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계속했다.

특히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회의의 제안으로 촉발된 의원정수 확대 문제 대해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면서 다른 주제에 대한 논의도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소위에서 새누리당은 야당이 제안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선거구 재획정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배제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특히 야당이 주장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개헌 논의와 같이 가야 하는 문제”라면서 “좋은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내각책임제와 공방이 맞는 부분이 있고, 이 정도의 개편은 의원집정부제로 갈 것이나, 대통령제로 갈 것이냐와 맞물려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의원정수 확대를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어떤 선거제도를 설계하고 선거구획정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의원정수가 연동하는 것”이라면서도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 분열의 가능성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비례대표는 최소한 줄일 수 없고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 의원 정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여야는 오후 회의에서는 ‘개방형 경선제’ 관련 법안에 다뤘으나 오픈프라이머리(원천국민경선제) 도입 자체를 둘러싼 심정차가 커져 역시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적극적인 새누리당은 ‘여야 동시 실시’를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당에 자율적인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며 정치신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의원정수 및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부터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정개특위에서 다음달 13일까지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하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획정기준을 놓고 여당은 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 대상 선거구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선거구의 연쇄적 재편이 불가피하더라도 현 선거구가 아닌 기초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해 1개 이상의 지역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 선거구를 분할·재조정해보자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리가 잘 안 되거나 숙려기간이 필요한 쟁점들이 많아(논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다음 달까지 획정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국감 9월 4일~23일 실시 잠정 합의

여야는 올 국감감사를 오는 9월4일~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간에 국감감사를 9월4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기로 일단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아직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전임 원내수석부대표와 그 때쯤 하게 했었다고 알려졌다”면서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의미로 본다”고 말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또 회의에서 “다음달 7일에 야당이 (8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낼 것 같다”면서 “이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놓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안전행정위는 내달 10일, 국방위는 7일 또는 10일에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관계기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조 수석부대표는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로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